

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계획

정부는 2월 1일(화) 농산어촌의 복지와 교육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부 등 15개 부처에서 4대 분야의 총 139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내용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(안)을 마련했다. 4대 분야의 기본계획으로는 ▲복지기반 확충 ▲교육여건 개선 ▲지역개발 촉진 ▲복합산업활성화 등으로 크게 나뉘며 정부는 이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.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09년까지 국비 11조5527억원을 포함 총 20조 2731억원이 투입할 예정이며, 이 예산은 119조 투융자계획과 국가중기재정계획에 맞춰 수립된 것이다.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, 15개 부처 장관과 농어업인대표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위원회에서 정부는 기본계획으로 농어촌을 기초생활여건, 교육·복지인프라가 잘 갖추어진, 국민의 20%가 거주하는 정주공간으로 만들어 도·농 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든 것이라 밝혔다. 정부가 내놓은 5개년 계획을 살펴보기로 하자 <편집자 주>

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

(1)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단계적으로 확대

- 건강 보험료 경감율 : ('04) 30% → ('06) 50%
- 가구당 연간 평균 경감액 : ('04) 210천원 → ('06) 404천원

(2)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

- 현행 연금보험료 기준등급을 현행 12등급에서 18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강화
 - 지원 표준소득 월액 등급 : ('04) 12등급 → ('09) 18등급
 - 1인당 연간 보험료 지원액 : ('04) 99천원 ~ 152천원 → ('09) 119천원 ~ 394천원

(3) 농림어업인 업무상 재해보상 지원 강화

-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
 - 사망 공제금 : ('04) 1,000만원 → ('09) 6,000만원
 - 1급 장해공제금 : ('04) 2,500만원 → ('09) 6,000만원

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

(1) 우수고교 육성 및 대학특별전형 확대

- ('05) 7개교 → ('09) 88개교
- 농산어촌지역 고등학생 대입특별전형 비율 : ('04) 3% → ('06) 4%

(2) 소규모학교 운영 활성화

- 통학거리 내 2~3개 작은 학교를 학교군으로 구성해 운영
 - ('05) 6개 학교군 → ('09) 86개
-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

- ('09까지) 학년당 7명 이하, 2개 학년 14명 이하로 강화

(3)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

-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전액 무이자 용자 지원
- 초등학교 학생 급식비 3/1지원을 중·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

지역개발 촉진

(1) 지역개발 주체역량 강화

- 농어업정보화 선도자 2,800명을 선정하여 농산어촌 현장의 정보화 지원 교육 확대

(2)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 조성

- 농산어촌주택 신·개축 용자금 지원한도 상향(2천만원 → 3천만원) 및 지원금리 인하(5% → 3%) 등
- 농산어촌 공공도서관을 '09년까지 41개관을 추가 건립

(3) 상·하수도 및 폐기물 관리시설 확충

- 면단위 미급수 지역(500개면)을 대상으로 상수도 설치 확대
 -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 확대 : ('03) 33% → ('09) 65%
 -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확대, 소하천 정비
- 군단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
 - 폐기물처리시설 수 : ('04) 109개소 → ('09) 140개소

(4) 농어촌 도로정비 등 교통서비스 개선

- 도로를 정비하여 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 개선 도모
 - 농어촌도로 정비 : ('04년) 18,210km(포장율 : 29.4%) → ('09) 19,270km(31.2%)

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

(1) 향토자원 산업화를 위한 특구 지정·육성

- 상품화, 경관의 자원화, 친환경농업이 가능한 농산어촌 지역 등을 발굴하여 특구로 지정·운영
 - 특구로 지정되면 농지·산림 등 34개 법률에 있는 71개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

(2) 농공단지 확대·조성 및 지역특화단지 육성

- 농공단지에 향토자원 업체를 유치해 지역특화 단지로 지정·육성
- 농한기 등에 농어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비용 지원

(3) 농산어촌 체험·휴양 기반 확충

- 농산어촌체험, 친환경농업, 전통문화 등 다양한 유형의 체험마을 육성
 - 시·군당 5~7개 조성, 1도1촌(선도마을)·1군1촌(우수마을)육성

기본계획의 실행과 관리

♣ 계획의 추진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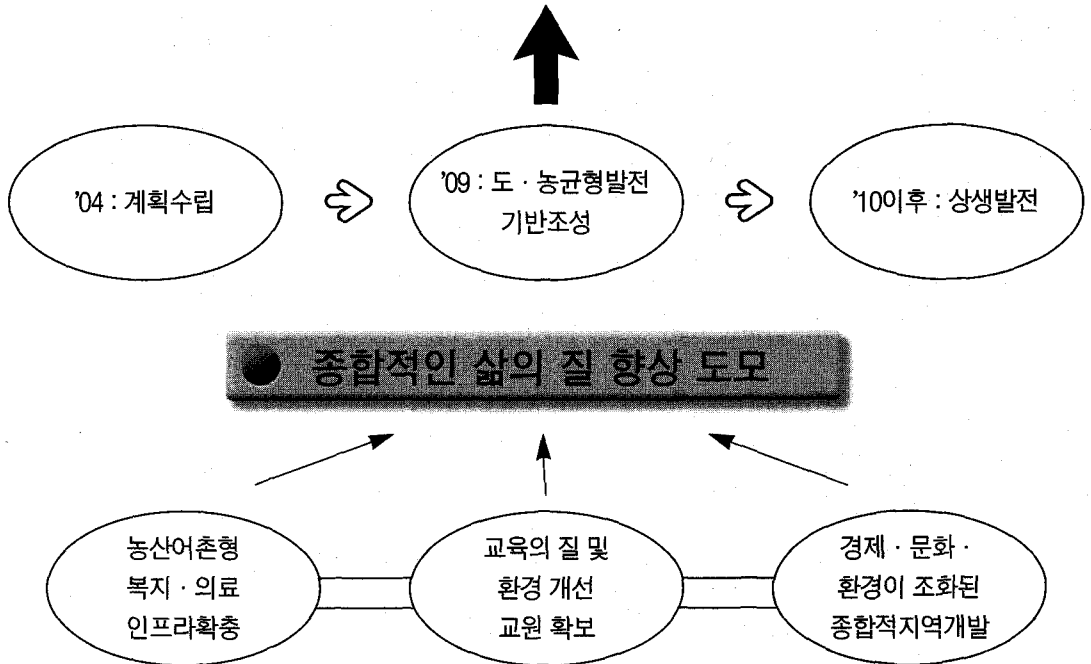
- ▶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는 매년 세부 시행계획 수립·추진
- ▶ 시·도, 시·군은 자체 5개년계획을 수립·추진

♣ 계획의 평가체계

- ▶ 위원회에서는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·평가 및 환류를 통하여 계획의 실효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

<농림부 자료>

목표연도 2009년의 발전상



부 문	'04	'09
복지기반 확충	-건강보험료 경감액 : 210천원 -연금보험료 경감액 : 152천원 -안전공제 지원(사망시) : 1,000만원	- 404천원 - 394천원 - 6,000만원
교육여건 개선	-우수교교 육성 : 7개교 -고교학비 지원 : 1.5ha이하 -대학특별전형 : 3%(1만1천명)	- 88개교 - 전 농어가 - 4%(1만5천명)
지역개발 촉진	-상수도 보급률 : 33% -도로 포장율 : 29% -마을종합개발 : 16개 권역	- 65% - 31% - 276개 권역
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	-농산어촌관광객 : 4천9백만명 -농공단지 : 305개소 (취업자수 11만3천명)	- 1억 1천 4백만명 - 354개소 (취업자수 13만3천명)

사실 그동안 복지 등 농어촌 정책의 부처별 분산 추진 및 농어촌에 대한 특별한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도·농간 복지여건 및 생활환경 격차가 확대되는 등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은 개선되기는 커녕 날로 악화일로를 달려왔다.

이에 따라 지역불균형과 상대적인 박탈감 등의 문제로 확산되고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.

이런 상황에서 농어촌 삶의 질 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. 허나 총 투입자 규모 20조 2,731억원 중 복지 3조 4,226억원(16.9%), 교육 3조 1,473억원(15.5%), 지역개발 11조 3,760억원(56.1%), 복합산업 2조 3,272억원(11.5%)로 복지와 교육에 관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특별법의 취지 자체가 모호한 상황이다.

지역개발과 관련해서는 타 부처와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자칫 예산의 사용이 불투명해 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.

복지와 교육부분에 관한 예산을 확대하여 열악한 농어업인 복지, 교육부분에 집중 투자하고 농어업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.

국무총리의 지적대로 이 특별법이 안고 가야 할 문제는 한국농업의 미래상이다.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2009년 이후 농업·농촌의 복지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어떤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느냐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된다.

농업인 삶의 질 향상은 농업전반에 관한 문제이자, 최대의 화두라 할 수 있다. 쌀 개방으로 농민들은 큰 시름을 앓고 있다. 정부는 농가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실천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, 개선할 사항들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고쳐나가야 한다. 그 동안 도태되었던 농업에 숨통을 풀어 주고 제목 그대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지역개발에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.

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, 이를 통해 농어촌이 활력을 되찾아 생산의 터전이자 살아숨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의 마련과 향후 추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 농어업인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농어업인의 복지를 최우선하는 정부의 보다 나은 정책을 기대한다. 인동연